

“외국인 근로자 운용제도 개선 필요하다”

“현 제도, 농업 특성 반영 못해 활용비용 낮아”

시도의회의장들, 농번기 인력부족 해결책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서면선의를 통해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

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제안 설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는데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의 공급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번기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계절근로자제도가 있는데,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비용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부문에 한해 지역조합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에 한정해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호상기자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게이트 기록권이 감춰온 부패 카르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인천을 방문해 “대장동 게이트로 대한민국 기록권 세력이 감춰온 거대한 부정부패의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부정부패 책임자와 공범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끝까지 몰수하겠다”며 “그것이 원칙과 상식, 정의의 공정을 대한민국에 질서로 뿌리내리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광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을 숨기고 정장을 시자했다”며 “이는 뻔뻔한 국민 기만행위로 당장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국가문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동의를 해주 바란다”며 “다수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하는 것 역시 국민 기만이다”고 덧붙였다.



/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 차 크다

전남·전북 90% 이상 지급받아... 서울이 74%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1,66만 9,718명 가운데, 4,325만 517명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돼 지급인원이 전체 88.73%수준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서울

이 74.41%로 가장 낮았는데, 955만 1227명 중 710만 5,864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

(36만 5,309명 중 29만 1,974명)였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

한 곳도 있었는데, 전남이 90.65%(189만 18,353명 중 166만 6,42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90.45%(179만 2,476명 중 162만 1,294명), 경북 89.9%(263만 254명), 강원 89.4%(153만 6,270명), 경남 89.2%(332만 2,373명)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90.65%)과 서울(74.41%)의 격차는 16.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리카 집중된 곳일 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



전북도는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구성 완료

도, 창립총회 열어... 초대 원장에 서양열 금암 노인복지관장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법인 설립 허가와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는 15명의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정관과 직제 및 조직(인사 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7월 임원 공모모집 절차를 거쳐 이날 원장 1명과 감사 2명, 이사 12명 등 15명의 임원진을 확정했다.

초대 원장에는 금암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원과 한국노년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겸직하는 등 이론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서양열 관장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서갑두 공인회계사와 당연직 임원인 이경진 전북도 사회복지과장 등 2명이 선임됐다.

일반 이사진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플랫폼의 기능을 하게 되는 사회서비스원의 특성을 반영, 당연직 임원인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과장을 포함해 학계와 보육·노인·장애인 등 영역별 현장 전문가와 지역사회 공헌자 등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

정됐다. 임원 선임에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장 선출과 함께, 정관과 직제 및 조직규정, 인사 규정 등 가장 기본적인 운영 규정 등을 승인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 따라 (재)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며, 10월 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개원할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임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이 도민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들의 기대 속에서 개원하는 만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유호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3.0%)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현황(중복신고 가능)을 살펴보면, 폭언이 5212건으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 중 35.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당인사 2348건(16.1%), 파동 및 합당 1725건(11.8%), 차별 48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으로 인한 신고건수도 346건(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